

광주시,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확대 시행

3월까지 긴급복지 재산 기준·생활준비금 공제 등 상향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권단,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확대 개선된 주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됐으며, 4인 가구 기준 317만원에서 731만4000원으로 공제액이 크게 늘었다. 결혼·장례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필수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은 차감해 적용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지원횟수 역시 동일한 위기 사유나 동일 상병으로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긴급지원이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생활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월 최대급여액은 1인 가구 54만8349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이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자 금융재산기준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731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66만5000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현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 요청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가 맞춤형 복지 지원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인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5·18민주유공자에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 지급

전남도가 올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도내 거주중인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매달 6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생계가 어려운 5·18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는 총 720여 세대다. 지원을 희망한 유공자는 오는 15일까지 거주중인 시·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주명예수당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5·18위상을 제고하고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남도는 5·18민주유공자를 위해 생활지원금을 비롯 장제비, 가사도우미, 교통 부름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료 납부 연장

6만4000가구...3월분까지 적용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납부유예에 이은 세 번째 납부유예로 오는 3월분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2만8000가구를 비롯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국가·민주·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3만6000가구 등 전남도내 총 6만4000가구가 해당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센터 및 사업자 등록번호

를 준비해 관할 도시가스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예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씩 연장되며, 실제로 1월 요금은 4월 말일까지, 2월 요금은 5월 말일까지, 3월 요금은 6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한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의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도내 소상공인 2041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4909가구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와 균등분할납부 혜택을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취학 아동 예비소집 5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성초등학교에서 열린 취학 아동 예비소집일에 취학 아동과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광주 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19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도시농업 정책자문관에 민간 전문가 고창록 씨 위촉

광주시는 "도시농업기본계획(5개년) 등 정책수립과 자문을 위해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인 고창록(사진)씨를 도시농업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농업 정책자문관은 ▲도시농업 관련 정책수립 및 자문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육성 ▲도시농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협업 등을 수행한다.

신임 고창록 정책자문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및 도시재생본부 도시농업마스터플랜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의 도시농업 정책 수립·추진에도 기여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고 자문관은 현재 광주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및 노원몬드다과협동조합 이사로 도시농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이다.

광주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1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실천공간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도시농업 정책을 전담해 추진하는 도시농업팀을 신설했다. 이용섭 시장은 "다년간 펼쳐온 도시농업 활동을 토대로 광주시민의 특별한 도시농업 정책이 추진돼 시민이 행복한 광주가 조성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로 출범한 광주복지연구원 임원 공모 연기

조례 개정 안 돼 다음달로 미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광주 복지연구원(가칭) 임원 공개 모집 절차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복지연구원 신임 원장, 이사, 감사 등 비상근 임원 12명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7~13일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복지재단에서 광주 복지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번 달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

으로 보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4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지만, 조례안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공모 절차를 다음 달로 연기하고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고 공모를 하면 출범이 늦어질 것 같아 먼저 공모에 들어가게 됐다"며 "절차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오는 만큼 공모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복지연구원은 광주복지재단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해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시 출연 기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언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27
	한국어교육학과	4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13
사범	유아교육과	5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1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 2021. 1. 18(월)

학부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1. 12(화) ~ 25(월)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